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의 經濟動向과 對策

溫 基 云

〈産業研究院 研究委員·商博〉

1. 머 리 말

오랫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오던 금융실명제 가 지난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전격 실시되었다. 실명제 실시 이후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 실명제 실시의 충격은 점차 가라앉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각 부문별로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實物部門에 있어서는 소비가 실명제 실시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도 자금경색 등으로 냉각되어 있다. 금융·유통·부동산 부문에서도 채권시장의 경색과 영세도매업자의 거래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실명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각 부문별 경제동향과 향후의 대책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금융실명제 이후의 경제동향

(1) 실물경제부문

1) 소 비

과소비억제정책과 司正으로 그동안 위축되어 왔던 민간소비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다. 즉 금융실명제로 인해 예금인출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통부문에서도 그동안 광범위하

게 행해졌던 무자료거래 기피현상으로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과소비를 주도하여 온 불로소득계층에서는 가명계좌의 실명화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증가로 실질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실명제와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허가제는 실수요자들간의 주택거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택관련 내구소비재의 소비부진으로 연결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향후에는 실명제가 정착될 경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명화 기한이 만료되는 10월 12일 이후에는 유동자금이 크게 증대되면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이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2) 투 자

그동안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었던 기업투자는 실명제 이후 자금경색 및 경제의 불확실성증대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정부의 대응책 및 새로운 금융질서 정착방향을 주시하면서 성급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고, 기업투자결정의 척도인 투자수익률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채시장 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운전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어 투자재원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향후 경기회복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

확실성 증대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당분간 투자를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명제가 정착되고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되기까지 당분간은 본격적인 기업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명제정착 이후에는 기업의 투자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종합과세 및 불로소득의 원천봉쇄 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이 기업투자쪽으로 유입될 것이고, 투자의 기대수익에 대한 예상이 보다 정확해져 합리적(경제적) 판단에 의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력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출입

아직까지 실명제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수출입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중소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금난이 점차 가시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채, 단자회사 등을 통한 무역어음의 할인이 곤란을 받고 있다.

무역금융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수출대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부딪치면 부품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이에따라 수출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실명제가 우리 수출업체의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기술 등의 기본적인 경쟁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엔高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물 가

실명제라는 제도자체가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실명제로 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해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에 몰릴 경우 물가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투기제한조치의 강화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귀금속 등 고가품가격도 안정되어 있다.

금융당국에서 실명제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량을 풀 경우, 이것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현재는 통화량 확대를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진 부분을 보완한다는 원칙하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실명제가 정착되어 돈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전부 나타날 경우 통화량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 긴 장마와 냉해 등 기상이변에 따라 각종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물가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실명제가 앞으로 가명, 차명 등을 이용한 단 불로소득계층의 가수요 내지 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제대로 거둔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금융 · 유통 · 부동산

1) 채권시장

지난 수년간 채권시장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이처럼 채권시장이 확대일로를 걸었던 것은 1986~89년 동안 무역수지흑자로 인해 해외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1992년에 국내주식시장 개방과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확대 등으로 해외부문에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통화를 환수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을 대량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89년부터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회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설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채발행 역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던 채권시장은 실명제 실시 이후 일시적이거나 일부투자자들의 매수 기피로 유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채권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국공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실시에 따라 지방재원의 마련을 위한 지방채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채발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 산업금융채권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 증권시장

실명제 실시 직후 크게 위축되었던 증권시장은 즉시 반등, 현재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증권사의 비실명규모가 타금융권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실명제의 영향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났다.

실명제 실시후 하락했던 주가가 수직 상승한 뒤 다시 부진한 것은 실명제 자체의 영향보다는 향후 경기전망 불투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주가동력이 계속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증시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3) 은행권

실명제 실시후 거의 모든 금융자산거래가 실명화됨에 따라 신분노출을 꺼리는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탈하여 금융기관의 수신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었다.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실명제를 피하여 이미 이탈한 자금이나 기존의 사채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환류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 비실명보유가 가능한 실물자산으로 전환되거나 제도금융권 밖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한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실명확인 및 가명·차명 계좌의 실명전환비율은 아직 계좌기준으로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액예금주들의 실명확인·전환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거액예금주, 이른바 큰 손들이 금융시장의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실명전환을 최대한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명제 실시 초기 가장 우려했던 거액의 자금인출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금 선호경향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금 선호경향으로 자기앞수표발행도 부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단자사나 투신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은 사채를 통한 자금조성을 많이 해왔고 이 가운데서 가명 혹은 차명으로 거래되는 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은 기존수신의 이탈은 물론 신규수신의 유입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또한 자금수요측면에서는 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동 시장에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여신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유통·도소매업

실명제 실시로 모든 유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함에 따라 무자료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실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연간매출 3,600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로 분류, 부가세율이 매출액의 2%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영세업체는 무자료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다. 실명제 실시 이후 관행이었던 무자료거래가 불가능해져 유통업체의 매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사채시장의 위축과 어음거래의 회피 등도 겹쳐 영세유통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유통업체별로는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 비해 재래시장의 소규모업체의 타격이 훨씬 두드러지고 있다.

당분간은 무자료거래의 축소에 따른 매출둔화, 자금난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유통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영세도소매업체들간의 공동구매, 협동화사업, 통합 등 유통구조의 근대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부동산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부동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소유자의 신분을 감추기가 더 용이한 데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등으로 인해 매력적인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초래된다. 그러나 비실명예금의 인출제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자금출처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등으로 매수의욕이 위축되고 있는데다가 매도자측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대하여 매물을 회수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위축되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자금출 처조사와 허가제 확대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에 따라 위축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의 대책

금융실명제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재로선 당 초 예상했던 만큼의 경제적인 혼란은 야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0월 12일을 전후한 거액예금인출 등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장래를 낙관적으로만 내다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위축, 실물부문의 전반적인 침체, 물가불안 및 실명제의 미정착 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은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금까지 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실명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 이외의 목적에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된다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금융정보 비밀보장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나 비밀침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잔존해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화관리의 효율적 운영

통화당국은 총통화증가율 고수라는 기존의 통화관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물이 원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실명제 실시 이후 장단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금리상승의 압력을 최소화하는데 통화관리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통화관리를 통화총량보다는 금리를 중심지표로 삼아 수행하는 것이 국민경제안정에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통화의 유통속도가 불안해지면 통화량과 국민소득, 혹은 통화

량과 물가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고 이러한 경우 통화량 자체를 중심지표로 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세제개편

실명제는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지만 세원노출로 세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자료양성화를 기피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오는 1996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 사업소득공제수준의 근로소득공제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법인세도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도 인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

실명제 실시의 영향은 대기업보다 영세소기업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명제 실시로 중소기업들은 사채시장 위축으로 인해 어음할인에 곤란을 받아 긴급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금까지 무자료로 거래하던 영세기업들은 세원추적을 우려한 나머지 대금결제도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세기업들은 담보력부족으로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대출마저 곤란하여 부도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업어음발행의 적격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사업기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하는 등 직접적인 자금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의한 기존의 신용보증방식을 지양하고, 사채자금의 유출이 확인되면 기업에 즉시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